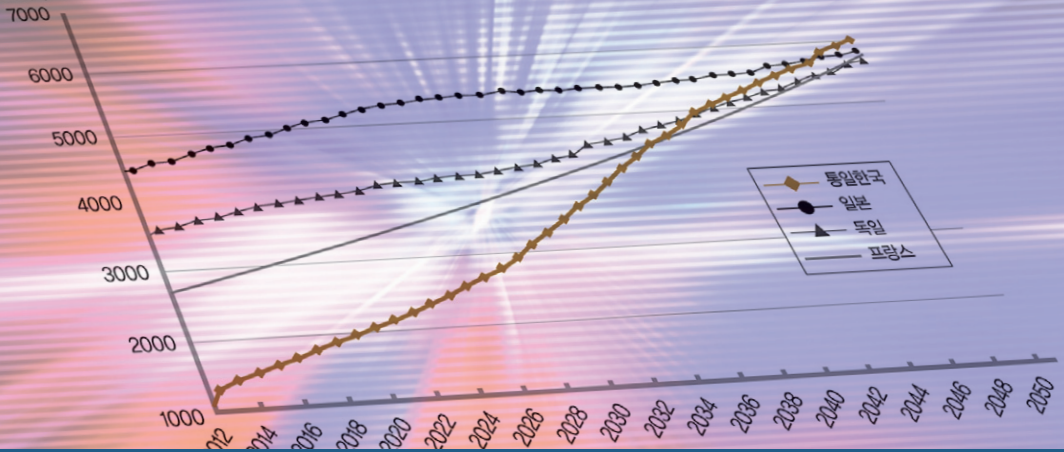


국가나 민족 수준에서 구성된 통일 필요성 논리를 넘어 개인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고성준 (제주대 교수)



통일부 통일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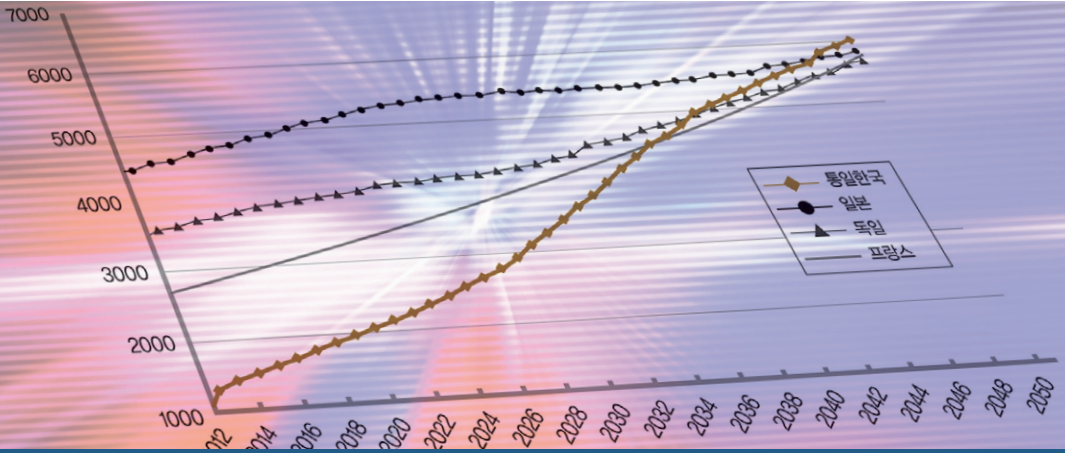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강좌’ 시리즈의 28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고 성 준 (제주대 교수)

CONT

I	왜 다시 통일 필요성인가?	6
II	통일 패러다임의 변화	12
	1. 기존 패러다임 : 분단관리	12
	2. 새로운 패러다임 : 통일대비	17
III	독일의 통일 효과	26
	1. 독일 통일의 편익	26
	2.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39
IV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46
	1. 통일비용의 올바른 이해	46
	2. 분단비용보다 저렴한 통일비용	50
	3.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	55
	4. 통일비용 경감을 위한 통일대비	60

EV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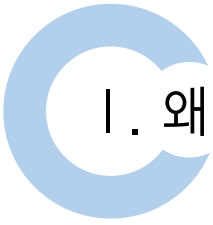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V	통일 필요성 논리의 재구성	66
	1. 통일 필요성 논리 구성의 방향	66
	2.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을 위한 논리	74
VI	통일 한국의 비전	96
	1. 정치·외교적 비전	96
	2. 경제적 비전	101
	3. 안보적 비전	107
	4. 사회·문화적 비전	111
VII	맺음말	118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왜 다시 통일 필요성인가?



1. 왜 다시 통일 필요성인가?

한 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6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이끌어나갈 주체·인식·환경·대상 등이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통일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민은 2011년 현재 90%가 분단 이후 태어났으며, 이들은 분단 이전 상태를 책과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이들은 우리 땅의 일부인 북한에 가본 적도 없고, 북한 주민을 만난 적도 없다. 북한사회,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은 물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학생들은 같은 노래, 같은 책, 같은 게임을 하는 일본이나 미국 대학생들에게서 북한의 대학생들보다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¹⁾.

1. 이상우, "통일교육의 어제, 오늘과 내일," 제17기 통일교육위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출범기념 세미나,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의 방향』(2010. 5. 13).

새로운 통일 주체들에게는 ‘통일 인식’도 단순하지 않다. 이들은 “통일을 꼭 해야 하나”라는 물음에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심도 있는 조사에 의하면 80%이상이 “무리하지 말고 분단 상태로 그냥 지내자”라는 식의 ‘통일 연기론’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남과 북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은 통일이 자신들의 국가이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통일 20주년은 분단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통일이 여러 어려움을 안겨주지만 분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실패국가로 전락했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지 못한, 시간적으로 보면 후퇴한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반세기 이상 남한에 대해 위협적이었으며 이제 핵무기까지 앞세우고 있다. 2010년 북한은 경제난과 김정일의 건강 이상에 따라 3남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봉건적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에 폭격을 가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잔인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세습·핵·빈곤·폐쇄’를 고수하는 한 체제유지가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 기존체제의 고수냐 개혁이냐의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다²⁾.

통일의 주체·인식·환경·대상 등 모든 것이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왜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지금까지 통일 필요성의 논리로 ‘단일 민족의 재결합’(단일민족, 단일국가론), 이산가족의 재결합, ‘남북협력론(남북 상호보완주의)’, ‘통일지상주의’ 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기존의 통일 필요성 논리로 새로운 통일 주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들에게 설득하는 데는 적지 않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나 민족 수준에서 구성된 통일 필요성 논리를 넘어 개인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통일에 대한 합리적·논리적·이성적 사고와 판단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하고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왜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달라진 통일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이 문제는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세워진 당위적 차원의 통일 필요성 강조와 ‘이산가족의 고통 호소’(또는 북한주민의 삶 개선)와 같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호소하는 정서적 논리 중심에서 벗어나 실리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통일이 가져다줄 실질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국민적 설득의 주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통일 이득이 무엇인지, 통일이 되면 어떤 면에서 나에게

2. 박명림, “북한은 어디로? - 세습, 핵, 빈곤, 폐쇄의 4중 악순환을 넘어”,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주관 한반도 포럼 창립학술 회의 발제문(2011. 3. 28)

이익이 되는지 등과 같은 쉽게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편익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객관적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산출, 체감할 수 있는 개개인의 통일 수혜 내용 제시 등을 통해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과 분명한 논리가 필요하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통일 패러다임의 변화

1. 기존 패러다임 : 분단관리
2. 새로운 패러다임 : 통일대비



II. 통일 패러다임의 변화

1. 기존 패러다임 : 분단관리

말 냉전 이후 통일에 대한 주된 접근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였다. 하나는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 영역에서의 결단을 병행하는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시각이다.

기능주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문제보다 비정치적 문제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그 편익과 영향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로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이것이 정치 영역에서의 결단을 유인함으로써 통합에 이르게 된다는 시각이다. 반면, 신기능주의의 시각은 비정치 영역에서의 협력이 정치 영역의 협력으로 전

이·파급되기 어렵다고 본다. 비정치적인 협력도 그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이 있어야 가능하며, 더욱이 정치 영역의 협력은 쌍방의 신뢰 구축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통합은 비정치 영역의 협력과는 별도의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능주의 시각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기능주의 시각에 비중을 두고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왔다. 두 전임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냉전시대의 갈등과 경쟁 구도를 남북한 상호 노력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 거쳐 정치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정치적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심화된 남북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일 패러다임은 유럽의 통합과정을 모델로 한 것이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과 유사한 상황이 북한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패러다임에서 통일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고,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선행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은 어떻게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분단관리’ 통일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관리’ 통일 패러다임에 근거한 통일정책의 전형이 바로

‘햇볕정책’이다. 전례 없는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면서 통일을 목표로 한 정책보다는 북한을 관리하고 남북관계의 현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법적인 통일’(de jure unification)보다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인정,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이루는데 관심이 집중되었다³⁾.

그러나 그간의 남북관계 경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분단관리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었다. 통일 지향적 분단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양 측의 힘과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대등한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조건 없는 양보나 희생이 아니라 상호주의적 양보와 협력이 일상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과거의 냉전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대결구도를 보여 왔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적 갈등을 남북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당초의 기대와 달리, 분단관리 패러다임에 따른 남북관계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과 통일을 앞당기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오랜 기간 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

3. 김근식, “연합과 연방 :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 6·15 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4호(2003), p. 169; 최진욱,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일연구원 주최,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세미나 자료집(2010. 10. 5), p. 2.

어 왔다. 북한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 개발 노선을 고수해 왔고,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 지금은 전 근대적 통치체제인 세습체제를 3대째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변화 자체를 거부해 왔으며, 변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전임 정부 10년 동안의 활발한 남북간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상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 해소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기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조하는 ‘분단관리’ 패러다임은 적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통일은 남북관계의 하위에 있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대북 포용정책 기조 하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추진 의지를 제고시키는 것보다는 교류협력의 확대가 보다 중요한 대북정책의 목표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문제는 가급적 먼 미래의 일로 미루어 놓고 경제·사회분야에서 교류협력의 양적 확대를 남북관계 발전의 지표로 간주했다. 그러나 결국 교류협력의 확대와 북한의 변화를 단선적인 관계로 낙관했던 기존의 통일 패러다임은 북한의 변화 거부와 핵무기 고집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분단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통일 패러다임 하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비전이 희석되거나 모호해지는 경향과 함께 통일은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통일의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통일비전이 불투명해지고 통일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도 약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서서히 사라져가게 된 것이다. 이처럼 통일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통일비용이 거론되기라도 하면 남아 있는 통일의지마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함께 독일 통일과정에서 소요된 천문학적 통일비용 및 여러 가지 통일 후유증이 과장되어 전파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통일은 비전과 희망의 대상이기 보다는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⁴⁾.

통일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의 단계를 차례로 거치면서 정치공동체로 통합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한 낙관론’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일이 밀어 닥칠 수도 있고, 또 통일과정 역시 예상된 로드맵과는 다른 경로로 나아갈 수도 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통일의 계기, 통일 경로, 통일 과정 등은 모두 돌발성, 예측 불가능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예상된 단계와 경로, 과정을 상정해 놓고 그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정착을 이루고 통일을 달성한다는 ‘분단관리’ 패러다임은

4. 최진욱,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pp. 2, 6.

순진한 낙관론이라고 할 것이다.

그보다는 언제든 예기치 않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통일 계기의 돌발성과 통일 경로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통일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을 체계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등을 준비하는 ‘통일대비’ 패러다임이 적실한 논리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통일 패러다임으로서의 ‘분단관리’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북정책의 관점을 기존과는 다르게 설정했으며,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남북관계 및 통일 패러다임을 ‘통일대비’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2. 새로운 패러다임 : 통일대비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과거 10년 동안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채택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초석을 다지는 데 목표를 두는 ‘상생공영 정책’이 그것이다. 과거 정부가 전례 없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포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화해와 협력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중장기적 효과로 기대되었던 북한체제의 변화나 대남정책의 변화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 하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의 개방과 정상 국가화를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제시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이 구상은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상생공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전략이 되었다.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9년 9월 21일 미국 외교협회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미국외교협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오찬 간담회 연설에서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원칙과 규칙의 수용과 실현을 거부하고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과 같이 무력도발로 일관하면서 남북관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수동적 방어전략에 치중해온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 억제전략을 채택하고, 나아가 북한을 정상화·민주화·개방화하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⁵⁾.

5. 김영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 박재규 편,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서울 : 법문사, 2011), p. 364.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달라진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자꾸만 역사를 거슬러 후진·후퇴하는 북한의 입지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건국과 분단 그리고 6·25전쟁으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은 이제 경제규모에서 세계 12위의 경제선진국이며,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G-20의 주도국의 하나인 ‘글로벌 코리아’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세계사에 역행하는 정치·경제적으로 최후진·빈곤국가가 되어 버렸다. 이제 한국이 나서서 실패 국가인 북한을 민주화·개방화된 나라로 변화시켜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되었다⁶⁾.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5주년이 되는 2010년 8·15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메시지인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했다. 이 통일구상은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정책적 주안점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이 통일구상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을 통일이라는 목표와 접목시켜 큰 틀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통일방안은 통일의 철학, 통일 비전, 통일 과정, 통일 방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⁷⁾. ‘3대 공동체 통일구상’

6. 김영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 p. 367.

7. 박종철,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과 이행구도,” 통일연구원 주최,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자료집(2010. 9. 1).

표 1.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통일 구상	과제	주요 내용
평화 공동체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실질적 평화 정착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랜드 바겐' 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실행 남북한 군비통제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실질적 과제 추진
경제 공동체	교류협력과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 경제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 남북간 경제통합 촉진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 경제 개발 지원 '비핵·개방·3000' 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남북간 경제격차 축소
민족 공동체	평화통일을 위한 분야별 과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반 분야의 동질성 회복, 통일을 위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완성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복지가 보장되는 공동체 건설

은 평화, 경제, 민족이라는 3대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3대 공동체는 선후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따라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1994년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 내에서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공동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실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일준비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남북관계와 통일정

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서의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란 곧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이는 급변하는 통일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 패러다임은 분단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대북정책과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향후 대북·통일정책 추진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을 대비한 현실적 방안 준비의 필요성이다. 통일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느냐가 통일의 방향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한 인적·물적·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⁸⁾

셋째,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이다. 이는 국민적 수준에서의 통일담론의 활성화, 나아가 통일문제의 공론화를 의미한다. 현 시점을 통일미래 및 이의 준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족공동체로의 통일과정은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빠를수록 통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취지이다. 준비 없이

8. 통일부, “8·15 경축사(통일분야) 참고자료,” p. 1.

맞이하는 통일은 시행착오와 혼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⁹⁾.

결국,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현상 유지적 ‘분단관리’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면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 및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통일교육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통일비용 보다 통일편익이 훨씬 크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고려할 때 통일은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는 확고한 국민적 인식을 형성·확산시키는 일이다. 둘째, 통일편익의 기대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 없이 통일이 밀어닥칠 경우 예상치 못한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남북한 통합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출발점은 통일 필요성과 그 논리를 새롭게 가다듬는 일이다. 특히 현 시기가 남북관계 및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통일대비’ 패러다임 하에서 통일 필요성 논리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9. 통일부, “8·15 경축사(통일분야) 참고자료,” p. 2.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독일의 통일 효과

1. 독일 통일의 편익
2.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Ⅲ. 독일의 통일 효과

1. 독일 통일의 편익

그동안의 대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미래 통일세대가 될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약화는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통일의식 약화 경향은 통일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있는가?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기존의 당위론적 통일논리의 한계,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부족, 탈 이데올로기 시대의 급변하는 21세기 상황, 학교·사회에서의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교사들의 관심과 이해 부족,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들 수 있다¹⁰⁾. 그런데 통일의식 약화의 또 다른 중

요한 원인으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독일의 통일 효과에 대한 오해이다. 그동안 독일 통일 사례는 통일 이후의 불협화음과 같은 그 후유증에 치중하여 우리에게 알려졌다.

통일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독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우위에 있던 서독이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인 동독을 ‘흡수통일’ 했다는 인식이다. 더욱이 통일과정에서 소요된 막대한 통일비용과 대량 실업 사태, 동독인 차별과 같은 내부적 불화 등의 통일 후유증은 독일 통일의 성과에 대한 비관적·비판적 인식을 강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독일 통일에 대한 편향적 접근과 평가도 올바른 이해를 저해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을 지향했기 때문에 독일처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통일, 그것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은 경제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과거 정부의 통일정책은 독일 통일 전 후에 통일 후유증에 초점을 맞춘 보도 등과 맞물리면서 독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¹⁰⁾.

셋째, 독일 통일을 평가하는 기준도 독일 통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왜곡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독일의 리하르

10. 통일부, “청소년 통일의식 관련 설문조사 종합보고”(2009. 9. 28); 오충석,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감코리아(2010. 5. 4).

11. 한운석, “독일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 『역사담론』, 제54집(2009).

트 슈뢰더(Richard Schroeder) 전 총리에 의하면, 독일 통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잘못된 잣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독일 통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구 동독을 구 서독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체제 이행을 경험한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거나 통일 이전의 구 동독 자체를 통시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동독은 매우 성공적인 변혁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¹²⁾.

독일은 통일 초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왔고, 20년이 지난 오늘날 새로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선형적 사례로 독일 통일의 경험은, 단기적으로는 통일비용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보다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오히려 통일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대비가 철저할수록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생생한 교훈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통독 20년의 통일 효과를 통일편익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통일 독일의 경제적 편익

통일 이후 구 동·서독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통일편익의 동독 지역으로의 확산의 한계를 지적하는 주요 근거가 되어 왔다.

12. Ralph M. Wrobel, "The Benefits of German Unification: A Review After 20 Years," 통일연구원 주최,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세미나 자료집(2010. 10. 5), p. 9.

독일 전체에서 구 동독 지역의 GDP 비중은 1991년 11.1%에서 2008년 15.1%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GDP, 근로자 급여, 총임금 및 월급 등의 지표에서도 독일 전체에서 구 동독 지역의 비율은 12~15% 수준에 불과하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통일 당시 동독은 서독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열세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세심한 비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일 당시 동서독의 주요 지표를 고려한다면 독일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 동독 지역의 낮은 GDP 비중 등 거시적 경제지표를 비관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 동독 지역의 발전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지표들이 있다. 그런 지표들은 여전히 구 서독 지역과의 경제력 격차는 있지만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 서독 지역의 증가율을 훨씬

표 2. 통일 당시 동서독의 주요 지표 비교(1989)

구분	서독	동독	서독 대비 동독의 비율(%)
인구(천 명)	62,063	16,614	26.8
면적(km ²)	248,252	108,588	43.7
인구밀도(인/km ²)	250	153	61.2
전체 취업자 수 (만 명)	2,774.2	888.6	32.0
1인당 GDP(\$)	19,283	5,840	30.3

출처 : 손기웅,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표 3. 독일의 주요 국민경제 지표 통계에 대한 동/서독 비교

지표	단위	구 서독 지역		구 동독 지역		구 서독 지역에 대한 구 동독 지역 비율(%)		독일 전체에 서 구 동독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1991	2008	1991	2008	1991	2008	1991	2008
국내총생산 (GDP)	10억 유로	1,364.0	2,114.9	170.6	377.1			11.1	15.1
거주인구	천 명	61,914	65,618	18,071	16,509			22.6	20.1
실업자	천 명	1,594	2,145	1,023	1,123			39.1	34.4
1인당 GDP	유로	22,030	32,231	9,442	22,840	42.9	70.9		
근로자 급여	10억 유로	723.5	1,036.6	121.5	141.8			14.4	12.0
총임금 및 월급	10억 유로	589.7	841.9	101.4	153.5			14.7	15.4
1인당총설비투자	유로	4,800	5,400	3,300	4,100	69	7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백서』(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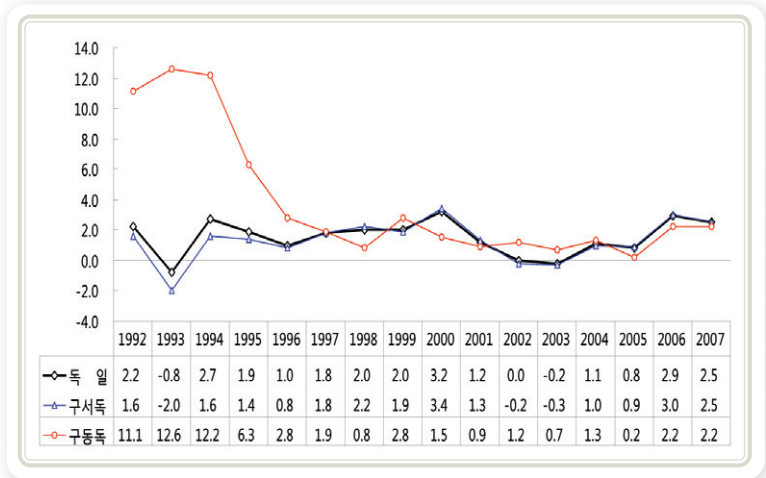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에 의하면, 구 서독 지역의 GDP가 1991년 1조 3,640억 유로에서 2008년 2조 1,149억 유로로 160% 증가한 데 비해, 구 동독 지역은 1991년 1,706억 유로에서 2008년 3,771억 유로로 220% 증가했다. 더욱 두드러지는 성장세는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의 1인당 GDP이다. 1991년 9,442유로에 불과했던 구 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2008년 22,840유로로 2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 서독 지역은 22,030유로에서 32,231유로로 146%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성장이다.

그리고 1991년 구 서독 지역의 42.9%로 절반에도 못 미치던 구 동독 지역의 1인당 GDP 비중도 2008년 70.9%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구 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체제 이행기에 있는 동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성장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1995년, 2000년, 2008년에 각각 구 동독 지역은 슬로베니아와 체코공화국과 함께 최고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했다¹³⁾. 그 외에 1인당 총 설비투자에서도 1991년 69%에서 2008년 76%로 구 동독 지역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통계 수치들은 양 지역 간에 격심했던 것으로 평가되어 오던 경제력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은 1990년대 중반까지 서독의 막대한 통일비용을 바탕으로 구 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1992~94년 양 지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면, 구 동독 지역은 11~12%의 성장률을 보였고, 구 서독 지역은 -2~2%의 낮

그림 1. 통일 이후의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 변동추이(단위: %)



출처 : 손기웅(2010),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13. Ralph M. Wrobel, "The Benefits of German Unification: A Review After 20 Years," p. 9.

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양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체 독일 수준으로 수렴되면서 1990년대 말 이후부터는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과 구 서독 지역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구 동독 지역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그 격차가 해소되는 추세이며, 일부 지표들에서는 구 서독 지역의 약 70~8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통일 효과, 특히 통일편익은 적어도 구 동독 지역의 재건과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함으로써 독일 경제 전체의 역동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 통일이 구 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뿐만 아니라 구 서독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 초반 구 서독 전역에는 ‘통일 붐’과 함께 구 동독 지역에 대한 민·관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1990년대 초반 유럽에 밀어닥친 경기침체를 상쇄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구 동독 지역이 구 서독 지역으로부터 많은 상품과 재화를 들여오면서 전체 독일 경제는 1993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외로 하면 외부의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높은 성장률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더욱이 구 동독 지역에 투자한 자금이 구 서독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었다는 점도 구 서독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대부분의 구 서독 기업들이 구 동독 지역 재건과정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 지역 재건 프로그램’(Aufbau Ost)은 구 서독 지역경제에도 지난 20년간 꾸준히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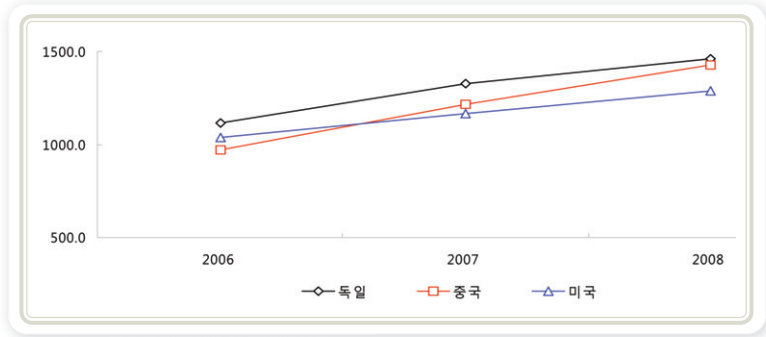
제 부흥책으로 기능해 왔다¹⁴⁾.

구 동독 지역에 쏟아 부은 엄청난 재정적 수혈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덕분에 통일 이후 독일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내에서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독일은 EU의 중추국가이자 가장 규모가 큰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독일은 통일 이후 2008년까지 줄곧 EU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GDP를 기록해 왔다. 2008년의 경우 독일의 GDP는 2조 9,097억 달러로, 영국의 2조 1,860억 달러, 프랑스의 2조 1,217억 달러, 그리고 이탈리아 1조 8,717억 달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¹⁵⁾.

독일은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그 국가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독일은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꼽힌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세계 주요 경제대국의 GDP에서 독일은 2005년과 2006년에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밀려 4위를 차지했다¹⁶⁾. 그렇지만 줄곧 5대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는 흔들림이 없다. 이것은 통일로 인해 구 동독 지역 1,800만 명의 소비자가 더해지면서 국내 시장규모가 확대되었고 국가 생산도 증가한 데 따른 혜택이었다.

14. Ralph M. Wrobel, "The Benefits of German Unification: A Review After 20 Years," p. 11.
15. OECD,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10).
16.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그림 2 세계 3대 수출국의 수출액 증가 추이(단위: 10억 US\$)



출처 : 세계무역기구(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07, 2008, 2009).

GDP뿐 아니라 수출 측면에 있어서도 독일은 세계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다. <그림 2>의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의하면, 독일은 적어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과 미국을 앞서며 세계 1위의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역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기 어려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 독일의 정치적 편익

통일 독일의 가장 큰 통일편익은 대외적으로 완전한 정치적 주권을 회복했다는 점이다¹⁷⁾. 통일 독일의 정치적 주권은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 점령국들이 1990년 2월 체결한 이른바 '2+4 조약', 즉 '독일 통일에 관한 최종처리 조약'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독일은 군대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으며, 대량 살상무기의 제조·보유·

17. Ralph M. Wrobel, "The Benefits of German Unification: A Review After 20 Years," pp. 3~4.

관리의 포기과 핵확산방지조약의 적극적인 수용을 통해 독일을 비핵지대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한 독일 통일은 유럽 통합과 EU 출범이라는 유럽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은 독일 통일로 비로소 서유럽과 동유럽이 화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럽 분할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유럽 평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독일 통일은 지난한 과정에 머물렀던 유럽의 경제 통합, 특히 단일시장의 형성과 단일화폐 유로화를 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럽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였다. 이제 유로존(Eurozone)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이 되었고 외환보유고의 27%를 차지하고 있다¹⁸⁾.

통일 이후 독일은 현실 국제관계에서 외교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완전한 대외적 주권과 그에 걸맞은 국력과 위상을 확보하면서 국익을 위해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독일은 또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공동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과 함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많은 자금을 공여하는 국가이다. 미국과 함께 양대 ODA 공여국이었던 일본이 2000년대부터 공여 자금의 규모를 축소시킨 데 반해,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증액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7~2008년 연속 미

18. 서재진, 『통일비전과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제주지역 학교 통일교육 대토론회,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기초강연 자료집(2010. 9. 17), p. 8.

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ODA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구 면에서도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을 능가하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EU에서 회원국의 인구수는 매우 중요하다. ‘2007 리스본 조약 (Treaty of Lisbon 2007)’은 유럽의회의 의석수를 회원국의 인구수를 반영하여 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은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만큼 EU 내에서 독일의 정치적 중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독일은 이러한 EU 내에서의 영향력을 넘어 세계적 수준에서 UN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로 이룬 완전한 정치적 주권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독일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도 꾀하고 있다.

독일은 비로소 통일을 통해 완전한 정치적 주권을 획득함으로써 EU와 UN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물론, ODA와 파병 등을 통한 기여외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의 통일편익이 경제적 편익에 비해 덜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독일은 통일을 이룸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국익 추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다.

3) 통일 독일의 사회적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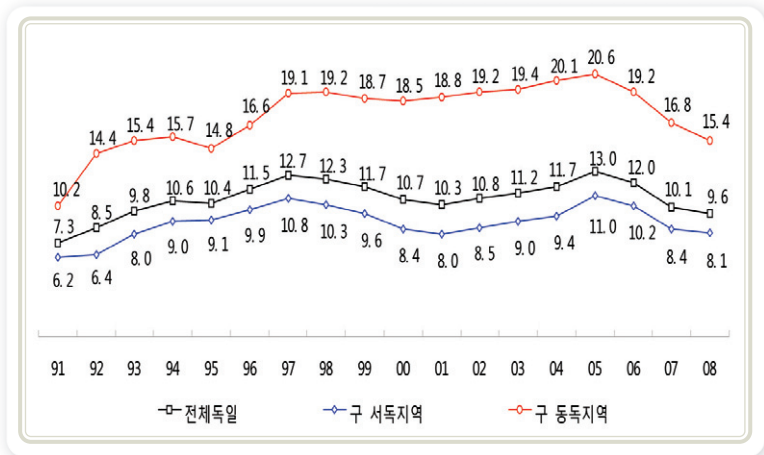
독일 통일은 그동안의 우리의 우려와 달리 경제적·정치적으로 많은 편익을 안겨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통일편익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즉 구 서독 주민들이 통일편익을 고루 누리고,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이전보

다 더 큰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한때 구 동독 주민들은 살인적인 실업률로 허덕인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것은 지표상으로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림 3>에서 처럼, 1990년대 말부터 2006년까지 20%대까지 육박하던 구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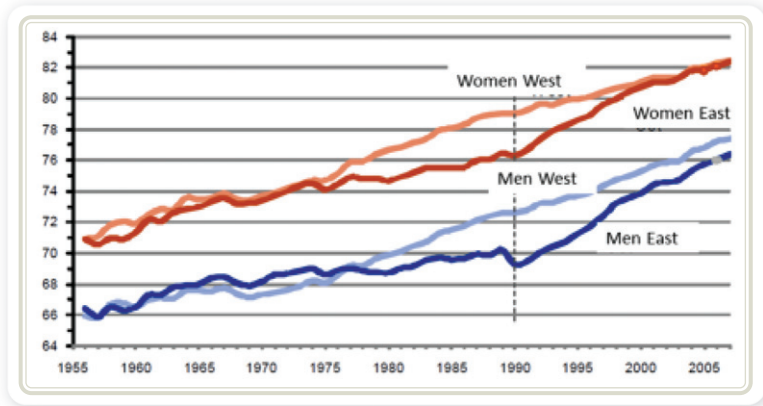
통일 이후 구 동독 주민과 구 서독 주민의 평균 수명의 수준도 비슷해지고 있다. <그림 4>에 따르면, 분단 초기에는 평균수명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통일 이후 건강을 해치는 공장들이 꾸준히 폐쇄 또는 개선되어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통일 이후 구 동독 주민의 평균수명은 구 서독 주민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림 3. 독일 통일 이후 실업률 추이(단위: %)



출처 : 손기웅,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그림 4. 독일 평균수명 (단위 : 년)



출처 : 독일 할레경제연구소(WH) ; Wrobel(2010)

독일은 통일이 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불러온 분단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독일의 발전을 향해 더불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는 더 이상 장벽이 존재하지 않고, 철조망도 없으며, 무장을 한 채 대치하고 있지 않다. 오늘날 독일 국민은 누구나 완전한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받고,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자아계발과 함께 크나큰 정신적, 물질적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¹⁹⁾.

물론 독일에서 오시스(ossis)로 불리는 구 동독 주민과 베시스(wessis)로 불리는 구 서독 주민 간의 심리적 갈등, 특히 구 동독 출신 주민들에 대한 비하, 그리고 그로 인한 소외 등의 갈등적 요소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또한 많은 동독인들이 옛 동

19. Jürgen Aretz,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 과정 그리고 전망,” 콘라트 아데나워재단·평화재단 공동주최,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 지속과 변화, 통합의 정치』 세미나 자료집(2009. 6. 23), p. 20.

독정부가 제공했던 완전 고용 등의 혜택과 같은 옛 동독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오스탈기’ (Ostalgie) 현상도 물론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아직까지 다른 부문에 비해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일편익은 더디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분단된 상황에 비해 미래에 나타날 편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독일 통일 20주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통일 독일의 통일편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 이후 통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통일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선형적 사례로써 독일의 통일 효과에 대한 관심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독일의 과다한 통일비용이나 내적통합 문제가 강조되면서 독일의 통일 효과가 왜곡되었다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통일 효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독일 통일 20주년에 즈음한 독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는 통일 독일의 통일편익에 대한 재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한 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한 몫 했던 독일 통일의 경험이 이제는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오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일 통일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독일 통일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주로 통일 초기 소요된 막대한 통일비용이었다. 이와 함께 내적통합의 문제와 사회적 혼란도 부각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 독일 통일은 성공모델이 아니라 실패 사례로 치부되는 듯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통일비용 조달과 통일 후유증에 대한 우려로 통일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20년을 전후한 최근 독일 통일의 초점은 통일 독일의 경제적 부흥,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 구 동독 지역의 성공적인 체제이행, 유럽 통합과 안보환경의 개선과 같은 긍정적 측면으로 바뀌면서 이를 새롭게 조명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이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되는 것은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재조명뿐만 아니라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비교 평가, 국민적 통일 의식의 확산, 통일대비의 필요성 등 많은 시사점과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독일 통일 20년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기보다는 독일과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곱씹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통일이 단지 편익만 가져온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비용만 수반한 것도 아니다.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통일비용은 최소화하는 대신

에 그 편익은 극대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 독일의 통일편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했고 또 대비하지 못한 통일로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통일 독일은 비용보다 많은 편익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통일편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통일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의 함의는 논리적 연속성을 갖고 있는 문제로, 궁극적으로는 통일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예상도 대비도 하지 못한 통일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독일 통일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은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종주국의 변화를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당시 서독 정부의 경우도 독일 통일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통일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당시의 동·서독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점진적으로 맞춰 나가면서 두 체제를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하나로 통합해 나간다는 장기적인 통일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작스럽게 통일이 들이닥치면서 기존 서독 정부의 통일 구상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통일로 인해 서독 정부는 통일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오판 - 예컨대, 동서독

마크화 간 일대일 등가 교환 -함으로써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계획도 없이 비용을 조달해야 했던 1990년대 초반의 서독 정부나 국민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국가적 부담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났다. 결국, 통일이 예상도 준비도 없이 들이닥치면서 실제 통일비용의 규모나 그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체감의 정도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독일 통일은 독일 국민들에게 비용보다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일편익은 분단 비용을 불필요하게 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편익들을 창출해내었다. 통일 독일은 거시경제지표에서 두드러지게 세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독일은 완전한 주권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EU의 중추국가가 되었으며 UN으로까지 그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동독의 재건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비용이 단기적으로는 독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독일 통일은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독일은 통일로 인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통일편익이 확대되면서 내부통합과 경제 재건을 넘어 세계 초강대국으로 국제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통일 초기의 통일 추진과정에서는 오판과 오류, 실수가

있었지만, 통독 20년의 시점에서 통일과정을 되돌아보면 독일 통일은 성공적이었다²⁰⁾.

독일의 통일 효과를 통해서 볼 때 갑작스럽게 도래할 지도 모르는 통일, 그리고 통일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 대비의 필요성은 최근의 남북관계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통일대비의 필요성을 ‘3대 공동체 통일구상’ 발표와 함께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는 그동안 통일대비 차원의 통일정책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통일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통일대비에 대해서는 소홀했음을 의미한다. 통일의 목전에서 통일 로드맵을 우리의 주도적인 전략 하에 만들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대비가 향후 통일정책의 중핵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 Ralph M. Wrobel, "The Benefits of German Unification: A Review After 20 Years," p. 16; Jürgen Aretz,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 과정 그리고 전망," p. 20.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IV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1. 통일비용의 올바른 이해
2. 분단비용보다 저렴한 통일비용
3.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
4. 통일비용 경감을 위한 통일대비



IV.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1. 통일비용의 올바른 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은 통일 후 각 분야별 실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통일의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상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통일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희망한다. 반면, 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충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긴다²¹⁾. 이처럼 통일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통일비용’이다. 전자의 시각은 분단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통일로 얻게 되는 편익을 고려하면 통일비용은 그다지 우려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후자의 시

21. 박종철 외, 『통일 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9-03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72~173.

각은 단기간에 지불해야 할 과도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며,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독일 통일 초기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에 따른 통일비용 문제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소극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독일의 경험에 기초한 연구들이 제시한 통일비용 추정치 역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여러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통일비용 추정치를 발표해 왔으나, 비용 산출의 근거가 된 개념이 각기 다르고 산출 방식도 달랐다. 이 때문에 통일비용 추정치는 최소 3,000억 달러대에서 3조 달러대까지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국민들에게 통일비용에 대한 혼란스러운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통일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의식을 약화시켜 온 주요 요인의 하나는 통일비용의 과대평가에 따른 인식이라 할 것이다. 즉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는 통일로 오는 통일편익과 분단비용의 해소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다.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은 통일이 되면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단선적 논리와 막연한 추정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통일비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 그리고 심지어는 통일 반대의 경

향을 조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통일비용 연구들은 통일편익을 무시하고 통일비용을 과다 추정 또는 평가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하나는 통일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통일비용을 산출할 경우 비용 부담만 부각됨으로써 통일기피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의 과다 추정은 통일비용에서 '총비용' (total cost)만을 고려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통일비용만이 아니라 통일편익까지 고려한 '순비용' (net cost)의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즉 통일비용은 총비용으로 산출할 것이 아니라 총비용에서 총편익을 뺀 순비용으로 산출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통일의 총편익은 총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통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통일비용뿐만 아니라 통일편익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과 이에 대한 총괄적 의미의 통일비용 연구가 필요하다²²⁾.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일비용의 과다추정의 또 다른 요인은 통일비용에 민간투자를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민간에 의한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전제로 한 자발적 투자이며 국민의 부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통일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통일비용의 개념은 정부의

22. 유병규·홍순직·최성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간』, 통권 422호(현대경제연구원, 2010), p. 1.

재정 부담에 국한시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이었다.

통일 기피론이나 통일 유보론, 통일 반대론 등은 통일을 단순히 ‘비용’이라는 관점으로 인식한 데서 나오는 문제이다. 독일의 한 인사는 한국에서 통일비용과 통일 추진에 관해 비판적으로 언급을 한 바 있다. “한국 사람들은 통일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에 집착하는데, 통일을 이룬 독일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 가족이 아파 급하게 병원에 갈 때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따져보고 병원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과 같다.” 라고 했다. 우리가 통일비용의 과다를 놓고 통일 추진 여부와 시기를 연계하는 것에 너무 빠져 있음을 빗댄 언급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냉철한 ‘머리’도 필요하지만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담해 온 분단비용만으로도 단기적인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거기에서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갖가지 통일편익까지 고려하면 결코 통일비용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통일은 분단 이후 60년 이상을 부담해왔고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부담해야 할 ‘분단비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분단 극복과 통합을 이룸으로써 갖가지 편익들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단비용의 근본적 해소와 통일편익의 향유를 고려하면, 통일은 비용보다는 편익 중심으로 인식해야 할 문제이며 이런 관점

의 전환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비교 등을 통해 통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문제를 균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일비용으로 인한 막대한 통일 우려나 회피 의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 분단비용보다 저렴한 통일비용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한 근거라면, 분단의 지속에 따른 분단비용의 부담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통일은 곧 분단 해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단 상황에서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의 해소를 가져오며, 이는 곧 그만큼의 막대한 통일편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인 통일편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비교만으로도 왜 통일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 쉽게 납득될 수 있다.

분단비용은 정서적 비용과 정치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으로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안보비용, 양극화된 흑백논리, 냉전체제의 유산 등이 있다. 그리고 ‘분단의 정서적 비용’으로는 남북한 간의 전쟁 가능성에 의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인간의식의 정신병리적 상태, 이념화와 체제경쟁의식의 내면화, 한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발전 제약 등이 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분단비용을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60년 넘게 큰 거

부담 없이 당연히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며 부담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는 분단비용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의 분단비용을 지불해 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바가 없다. 분단비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쉽게 체감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분단비용은 남북한 분단이 지속되는 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남북한 통일 이후 단기간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또 분단비용은 소모성 비용인데 반해, 통일비용은 투자성 비용이다.

분단비용을 산출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방위비이다. 여기에는 국방 예산과 국방 인력이 주로 포함된다. 한국의 국방비는 2008년 GDP 대비 2.5%인 280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는 GDP 대비 20% 이상이지만 북한의 경제규모 때문에 약 5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를 합하면 33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다른 부문에 소요될 예산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뜻하며, 이는 그만큼 국가와 사회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국방예산으로 책정되는 비용 이외에 군대에 투입되는 인적 자원도 엄청난 수준이다. 통일 후 남북한이 4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비례로 환산하면 남한은 27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게 되어 국방비 지출과 보유병력의 축소만을 통해 연간 평균 4~5조 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²³⁾. 남북한 총 군사비 연간 230억 달러 가운데 남한만 보더라도 4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절감하여 경제건설에 전환할 수 있다. 200만 명의 병력을 30~40만 명으로 축소할 경우 서울과 신의주간 고속도로를 연간 5개 건설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다²⁴⁾.

사실 국방비 지출과 병력규모의 축소로 발생하는 편익은 통일이 가져올 유형·무형의 편익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그렇지만 군사비를 절감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한보다 군사비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물가, 성장률, 국제수지, 이자율 등 남한과 북한의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군비 및 병력 감축이 가져올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분단비용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분단비용 연구들은 주로 이러한 방위비를 중심으로 산출한다. 중앙대 신창민 교수가 2007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분단비용을 GDP 대비 4.65%로 산출했다²⁵⁾.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할 때, 2009년 한국 GDP는 약 8,300억 달러였고, 이 중 분단비용으로 약 386억 달러(44조7567억 원)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분단 상태에서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3% 선을 유지

23.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학술회의 자료집(1997. 6. 5), p. 99.

24. 『연합뉴스』, 2010년 5월 4일자.

25.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8. 31).

해 왔고, 통일 한국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GDP 대비 1%로 가정할 때, 통일로 2% 포인트의 군사비 지출 감소 효과가 있다. 또한 한국의 군 병력은 69만 명인데 통일 이후 10만 명까지 감축할 수 있고 나머지 59만 명이 산업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산업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비용은 GDP의 2.65%나 된다.

연세대 정갑영 교수에 의하면, 남북한은 남한 GNP를 기준으로 최소 매년 5.95%의 분단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²⁶⁾. 이는 남한의 군사비(3.47%)와 북한의 군사비를 남한 GNP로 환산한 금액(1.12%), 그리고 남한의 60만 군대 유지비를 다른 경제활동에 전용해서 생기는 효과를 환산한 기회비용(1.36%)을 합한 것이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1997년 당시 총 누적 분단비용을 175조 원으로 보았다²⁷⁾. 분단비용은 이처럼 전문가마다 다르게 산출된다. 정부도 1990년대 말 이후 분단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방위비 중심으로 산출되는 분단비용은 상당 부분 통일되면 소멸될 비용이다. 통일의 편익 중에서도 특히 분단비용의 해소는 통일 이후 단기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으로서 비용의 부담을 적지 않게 덜어주는 요인이 된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경쟁으로 유발되는 외교비 역시 분단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남북한 갈등시 뿐만 아니라

26. 정구현·정갑영, 『통일 빠를수록 통일비용 덜 든다: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어느 쪽이 더 큰가?』(동화연구소, 1997).

27.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상시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경쟁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많은 외교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 즉 방위비와 외교비 이외에도 국내에서 이념 및 통일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대북 관련 기관을 유지하는 비용, 대북·통일정책 관련 정부의 고정적인 행정비용 등도 모두 분단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분단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분단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북한 국토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만주와 시베리아 등의 대륙과의 연결통로일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출로라는 점에서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기회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런데 분단비용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적 비용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무형적 비용도 많다. 이산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상시적인 전쟁 위협, 분단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 사회적 갈등과 대립, 자유로운 사상과 사고의 제한 등 무수한 분단 폐해들도 있다. 이 모두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내재화된 분단비용이다. 결국 직접적인 유형적 비용과 다양한 기회비용, 그리고 무형적·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분단비용은 사회 곳곳에서 산출이 불가능할 만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은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분명한 사실은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다. 분단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영원히 부담해야 할 소모성 비용인 데 반해, 통일비용은 한시적 부담이자 투자성 비용이

기 때문에 결코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통일과 함께 이러한 분단비용들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아울러 통일이 되면 분단으로 인해 초래되었던 폐해와 비용이 종식되고 통일이 가져올 새로운 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3. 통일비용보다 큰 통일편익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비교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통일비용은 단순한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첫째, 통일비용은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생산 비용’이다. 남북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하나의 체제와 이념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국가건설 과정이다.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당연히 경제적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통일비용은 사용하면 없어져 버리는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미래 통일 한국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사용되는 건설적인 ‘생산 비용’이다.

둘째, 통일비용은 북한 동포의 인권과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생명 비용’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은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와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이른바 ‘꽃제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탈북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통일비용은 이러한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과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 비용’이다.

셋째, 통일비용은 단순한 소비적 지출이 아니라 낙후된 북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건 비용’이다. 북한은 최악의 전략난 때문에 공장가동이 어려운 형편이며, 밤에는 전기사용을 억제하는 바람에 미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한 야간 인공위성 사진에서처럼 ‘밤만 되면 북한이 사라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정도이다. 북한이 생산 효율성을 잃어버린 지는 너무나 오래되었으며, 북한 경제는 자력으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피폐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회생불능의 북한을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통일밖에 없으며, 따라서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 소요되는 통일비용은 ‘재건 비용’이기도 하다.

넷째,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하나같이 잘 살기 위한 미래의 ‘투자 비용’이며, ‘새로운 삶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다. 통일비용의 상당 부분은 통일 이후에 열악한 북한의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데 드는 ‘투자비용’이다. 또한 통일비용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 및 인적 자원을 한국의 자본 및 개발역량과 결합하여 북한을 재건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는 남북한이 각각 보유한 자원의 연계 및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주는 ‘새로운 삶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처럼 통일비용은 그 자체로도 단순한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통일 한국의 기반구축을 위한 ‘생산비용’이며,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생명비용’이고, 회생 불가능한 북한 경제를 구할 ‘재건비용’이며, 남북한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투자비용’이자 ‘새로운 삶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것만으로도 통일은 비용에 구애됨이 없이 충분한 가치를 가진 잠재적 편익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은 곧 분단으로 인한 군비 지출과 안보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분단비용을 해소시킨다. 예컨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분단비용 해소, 남북 경제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등과 같은 편익을 가져온다. 통일편익은 경제적 편익만이 아니라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비경제적 편익들, 예컨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전쟁 위협의 해소 등과 같은 편익들도 창출한다.

더 나아가 통일비용 자체도 편익을 발생시킨다. 통일비용 지출은 북한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산업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남한지역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증대로 연결되며, 북한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북한지역에서의 세입증대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증대시켜 남한지역의 통일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미처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통일편익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용과 편익의 단순비교에 입각하더라도, 통일은 분단 상태에서 지불해 온 분단비용을 상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통일비용 대

비 통일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소극적·부정적 인식이 과거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지배해 온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독일 통일에 대한 일면적 이해와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초기에 사회적 혼란, 과도한 비용 지출, 그에 따른 각종 고통 등을 경험했지만, 통일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독일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독일의 통일비용으로 인한 후유증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독일 연방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991~2003년 간 통일비용은 1조 2,800억 유로(1990~2005, 약 1조 4천억 유로)였다. 통일비용으로 한 해 평균 1,000억 유로 정도 부담한 셈이나,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 지출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2003년도 통일비용의 경우 투자성 지출(37.2%)에 비해 소비성 지출(62.8%)로 거의 2배 가까이 지출되었다. 그럼에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당시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1/3 수준이었으나, 통일 20년이 지난 현재 동독 지역의 경제는 서독의 70%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제 독일은 군사적 측면을 제외하면 통일을 통해 세계 정치·경제에서 분단 이전 상태로 복귀하고, 다시 과거의 강대국으로 '귀환' 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통일 초기의 문제일 뿐이었다. 중장기적으로 독일은 경제적·정치외교적·사회적으로 엄청난 통일편익을 누리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편익은 독일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무한대의 편익으로 독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동안 국내의 많은 학자들과 연구기관에서 나름대로 통일비용을 계산했지만, 사실 정확한 계산이란 불가능하다. 수 천 억 달러에서 수 백 조 달러까지 조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동안 연구된 통일비용 추정 결과들은 대체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나 통일기준연도가 지나버린 추정치들이었다. 우리도 그동안 과장된 통일비용 계산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다양한 통일편익에 주목하여 우리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균형적 시각에서 추정한 분석들이 필요해지고 있다.

표 4.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 결과(단위 : 억 달러)

북한의 1인당 목표소득		\$3,000(10년)	\$7,000(15년)	\$10,000(18년)
통일비용(A)		1,570	4,710	7,065
통일편익(B)	부가가치 유발	836	2,509	3,764
	국방비 절감	1,226	2,623	4,245
	국가위협도 감소 (외채조달비용절감)	135	230	341
	소계	2,197	5,362	8,350
통일 순편익(B-A)		627	652	1,285

출처 : 유병규·홍순직·최성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간』, 10-42, 통권 422호(2010. 10. 28).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부문에서의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추정한 결과,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후 북한 1인당 소득 3,000달러 달성에 있어서, 통일편익은 통일비용 1,570억 달러보다 약 630억 달러 많

은 2,1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7,000달러와 1만 달러 목표에 있어서도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각각 652억 달러, 1,285억 달러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4〉 참조). 따라서 통일은 남한에게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막대한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은 비용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편익도 발생시키며,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또한 통일비용은 단순히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북한 지역 재건을 위해 쓰여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성 지출이다. 그리고 투자는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이득을 발생시킨다. 투자 이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적다. 또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훨씬 크며, 통일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많다. 통일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얻게 될 통일편익은 사실상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이유는 없다. 통일은 통일비용에 허덕이게 하는 재앙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편익을 고루 누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있어 이전보다 더 큰 발전의 동력을 제공한다. 통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미래산업이다.

4. 통일비용 경감을 위한 통일대비

분단비용을 포함한 통일편익에 대한 새로운 인식만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비

용은 통일시점부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그에 따른 편익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비용은 당장 현 세대가 겪어야 할 부담인 반면, 통일편익은 대부분 다음 세대가 미래에 누릴 이득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발생 기간별 불일치로 비용 대 편익의 논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편익이 비용 보다 크다 하더라도 통일을 추진해야 할 통일세대가 과중한 부담 때문에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따라서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통일 준비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이 많은 통일비용을 지출한 데는 통일에 대한 대비 없이 급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의 과도한 통일비용 지출에는 통일 당시 독일 정부의 과도한 낙관론과 부적절한 통일비용 배분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사실, 독일 통일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만큼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의 준비도 전무했다. 그래서 독일은 통일 직후 단기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통일대비를 통해 통일비용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실질적인 통일비용은 여건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 준비를 위해 비용 조달 역량과 해결 방식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독일 통일 20주년을 돌아보면서,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정부 관료나 학자들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 공통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바로 ‘통일대비’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을 지

금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통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과도한 통일비용 소요 사례로 독일 통일의 사례를 드는 것은 남북통일 역시 독일의 통일방식을 전제로 한 평가이며, 또 통일의 부정적 측면에만 주목한 결과라 할 것이다.

통일 방식은 독일식의 급진적 방식 외에도 통일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해 나가고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점진적 방식도 있다. 2010년 6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점진적 통일방식과 급진적 통일방식 각각의 경우에 통일비용을 산정한 결과, 급진적 통일방식은 점진적 통일방식보다 7배 이상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북한 통일방식은 독일 통일과 같은 급진적 방식보다는 점진적 방식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독일이 겪었던 어려움을 교훈으로 삼아 철저히 대비한다면, 우리의 통일은 좀 더 건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또한 통일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더불어 통일 방식, 통합 방식, 통합 수준 등 통일대비를 위한 총체적인 연구를 통해 통일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이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대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통일대비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미리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두면 통일 이후 우리 경제가 한꺼번에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많은 방식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독일의 ‘통일연대세’, ‘독일통일기금’ 등이 조성되어 통일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통일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 민간부문과 해외부문을 이용한 다양한 통일비용 조달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비용의 부담은 막대하지만 이를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탐색하여 미리 준비하고 민간 및 해외부문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비용조달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대비 차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통일비용 조달 방안이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통일의식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한국 이후 불필요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통일 필요성 논리의 재구성

1. 통일 필요성 논리 구성의 방향
2.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을 위한 논리



V. 통일 필요성 논리의 재구성

1. 통일 필요성 논리 구성의 방향

1) 논리 구성 시각의 전환

통일 필요성은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이자 원천이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없이 통일의 달성은 어렵고 그 정책 추진도 추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 역량을 꾸준히 함양하는 가운데 통일정책이 추진될 때, 통일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분단 초기에는 굳이 통일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둘로 나뉘고 장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단 65년 동안 한국사회도, 북한사회도, 그리고 국제정치 환경

을 포함한 통일 환경들이 크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통일의 의미나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도 변화하였다. 더욱이 우리 국민 90% 이상이 분단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분단을 주어진 조건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통일은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통일은 먼 미래, 언젠가의 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날이 갈수록 약화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통일 필요성 논리는 다양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미진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이질감이나 배타성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감정적·정서적 연대만으로 통일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왜 통일이 필요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에 접근하면서 병행해야 할 점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차원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첫째, 거시적 논리와 미시적 논리의 병행이다. 그동안의 통일 필요성 논리는 거창하게 국가 또는 민족 문제로 접근해 왔고, 미

시적 측면인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민들은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현실과 유리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통일문제는 그동안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보다는 민족 문제와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에서는 분단된 국가와 이산가족의 문제를 동포애에 호소하는 인도적인 관점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점과 국가적·민족적 변영 같은 거시적 측면,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혜택을 병행하여 통일은 국가와 민족 문제인 동시에 곧 나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당위적 논리와 실리적 논리의 병행이다. 기존 논리 중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당위론적 논리일 것이다. 특히 민족주의적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한 민족=한 국가’의 논리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세계사적으로 ‘1민족 1국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나의 민족이 여러 국가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룩한 경우도 많다. 아울러 최근 들어 민족 개념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위적 논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월드컵 응원이나 일본·중국과의 독도 및 역사 논쟁에서 보듯이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계기로 민족주의적 정서를 서슴없이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에서 한민족 구성원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민족주의 정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정서적 동인이기도 하다.

무조건적 당위론으로서 민족과 민족주의를 동원하는 것은 문

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기본 정서를 외면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논리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유효한 당위론적 논리를 보완하는 가운데 실리적 논리를 적절히 병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감상적 논리에서 합리적 논리로의 전환이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감상적 논리란 통일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우리의 가장 앞선 국가적 가치로 간주하는 논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일은 감상적 접근만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무엇을 위한 통일이고 어떤 통일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통일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인류 보편의 가치인가 아니면 특정 체제에 편향된 가치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인가 무력에 의한 통일인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과정과 방식, 결과가 어떻든 통일만이 우선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감상적 논리는 통일지상주의에 다름 아니며,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는 현상유지보다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상적 논리에서 보다 합리적인 논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좋은 통일, 바람직한 통일을 목표로 통일된 국가와 국민이 모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는 통일 논리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기존 통일 필요성 논리의 내용과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합리적 비판을 통해 새로운 통일 논리와의 결합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통일 논리 구성에 대한 접근 시각

은, 과거 논리에 대한 새로운 논리의 배타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과거 논리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토대로 새로운 논리와 공존되어야 할 논리는 병행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시각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환적 인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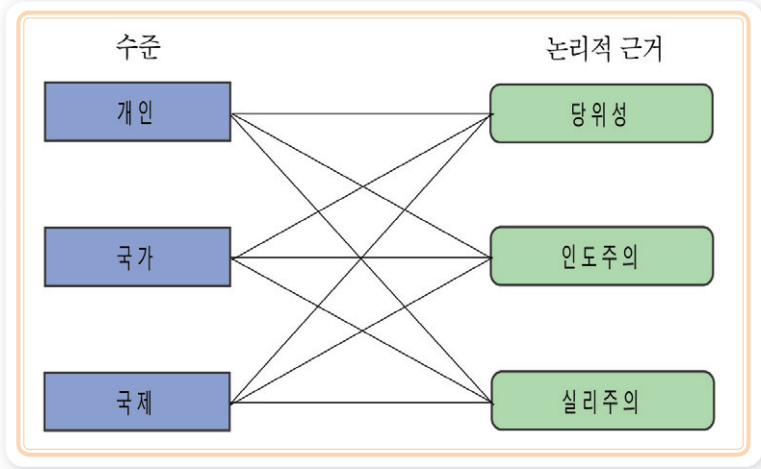
2) 논리 구성의 기본 구조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교육 지침서에는 통일 필요성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 방향으로 “당위적·실리적·인도적 차원” 등에서 인식할 수 있게 교육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인식²⁸⁾” 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필요성의 논리는 기존의 국가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국가적·국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논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적 수준, 남북한 국가 차원, 동북아 지역 차원, 국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통일 필요성 논리의 체계적인 구성 방향을 분석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나름의 주장들을 제기한다. 예컨대, 당위적 차원에서 실리적 차원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는 경우, 국가적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논리들을 개인적 차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대체로 최근에 새롭게 제기되는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 개

2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2010).

그림 5. 통일 필요성 논리 개발의 수준과 논리적 근거



발의 주된 방향은 기존의 당위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실리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통일교육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가치나 관심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리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개인적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통일을 통해 개인들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통일이 개인의 이익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들의 통일 의지도 훨씬 적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관점은 과도한 개인주의적·이익 중심적 설득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국가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국민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또한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민족주의나 인도주의 같은 정서적 동정심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당위적 차원이나 인도적 차원의 논리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통일문제의 복합성을 간과하고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명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아가는 교육방식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²⁹⁾. 통일은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적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더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 필요성 논리는 북한 동포에 대한 동족 의식, 통일의 당위성, 합리적 통일방식 등이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³⁰⁾.

통일 필요성 논리는 기존 논리의 유용성은 살리고 한계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되었던 당위적·인도적 측면의 논리적 근거들을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근거로 대두하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실리적 측면을 조합하여 논리적 근거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통일 논리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할 것이다. 통일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인식 없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 이득이 된다는 논리로는 국민적 공감을 끌어낼 수는

29.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진단과 개선방향” 『평화학연구』, 제9권 2호(2008), p. 176; 우 평균, “통일교육의 구상과 실천과제: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평화학연구』, 제10권 1호(2009), p. 153.

30. 이상우, “통일교육의 어제, 오늘과 내일,” p. 13.

있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통일 의지와 통일을 위한 참여까지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일은 곧 '나의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리고 통일편익이 개인적 편익으로 쉽게 환원될 수 있을 때 통일 관련 참여의지가 확산될 것이다.

실리적 차원의 논리는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논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동안 통일이 가져다 줄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 왔다. 개인에게 실리적 차원에서 통일 필요성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 경제적 효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다양한 경제적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내수시장 확대와 대륙으로의 경제적 진출에 따라 개인들은 직업 선택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다 넓은 시장경제 권역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통일의 실리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통해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때문에 통일은 나와 국가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 이익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통일에 따르는 단기적 부담과 장기적 이익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비용과 고통이 단순히 북한 주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용과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도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

저다 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분단의 구조적 제약 해소가 일차적으로는 나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통일비용과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통일비용 문제가 통일정책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혹은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크게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과 논의가 부족했던 실리적 차원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논리와 그 근거, 그리고 사례들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통일편익은 정치외교적·경제적·안보적·사회문화적 측면 등 다양하며, 이러한 각종 통일 효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발굴·개발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을 자각·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을 위한 논리

1) 정치·외교적 차원

(1) 강소국 중견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치와 광복 직후 미군정 통치로 독립국가로서의 위상과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새롭게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1991년 9월 18일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은 각기 별개의 의식을 가진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했다. 그러나 여전

히 ‘분단국가’라는 꼬리표는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 ‘분단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구분해서 불렀듯이, 외국에서는 우리의 공식 국가 명칭인 ‘대한민국’, 즉 ‘The Republic of Korea’보다 ‘South Korea’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분단 독일’은 통일 이후 단일 국가, 즉 ‘통일 독일’로 새로운 국제적 위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꼬리표라고 할 수 있다. 분단은 곧 불안한 국가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된 독일도 과거에는 그랬고, 현재의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분단국끼리의 상호 적대와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경우 불안은 훨씬 가중되며 국제사회, 특히 강대국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지역이 된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중요한 군사·외교적 이슈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다. 북한 핵개발 문제는 이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회담’은 남북한 이외에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과 개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세 개입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분단 한국’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약소국이며 불안한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통일은 그동안 늘 우리를 따라 다녔던 ‘분단 한국’의 꼬리표를 떼어 내고 ‘통일 한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제무대에 등장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동북아의 변방에 있던 약소국 지위를 벗어나 작지만 강한 국가, 즉 강소국(強小國)의 위상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과 영향력을 수행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를 지향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주도자

동북아 지역은 과거 ‘냉전’ (cold war)의 유산이 그대로 잔존하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며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지역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강대국의 각축장이었던 역사적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냉전의 유산을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는 남북한의 대결과 북핵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오래된 유산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형성된 남북한 갈등과 대립은 동북아 지역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논의하기 어려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단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들 간의 긴밀한 연대나 공동체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이 통일되면 남북한의 상생공영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 유일의 냉전적 유산이 일소됨으로써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비핵국가를 지향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

해 힘쓰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가 없어지고 평화적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동북아를 엮는 거대한 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 어느 곳보다 더 강력하고 실용적인 공동체가 탄생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계기로 동북아 역내 통합과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고양시킴으로써 통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세계 갈등의 불씨이자 중심이었던 20세기 독일이 통일과 함께 21세기 세계평화와 안전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나선 것처럼, 우리는 통일을 통해 동북아 ‘갈등의 불씨’에서 ‘평화와 번영의 주도자’로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을 계기로 유럽 대륙이 EU로 통합된 것처럼,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이 제고됨은 물론 동북아 공동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차원

(1) ‘규모의 경제’ 효과

통일이 되면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규모의 경제’ 효과이다.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란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생산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는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가 이익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통일이 되면 국토의 넓이가 현재 99,000km²에서 220,000km²로 확대되어 세계 120위권에서 단숨에 50위권으로 상승하게 된다. 인구 역시 현재의 5,000만 명에서 7,4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세계 25위에서

18위로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국토와 인구가 거의 2배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 되며, 그만큼 경제활동의 영역과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강대국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규모가 큰 국가들이고 적어도 중간규모의 국가가 되어야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이 바로 중간 규모의 국가들이면서 선진국에 속한 국가들이다. 또 캐나다나 호주 같은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들도 선진국에 포함되는 중견국가이며, 국제사회의 다방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은 아니지만 방대한 국가 규모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들이 있다.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등 신흥경제 4국을 일컬어 브릭스(BRICs) 국가라고 한다. 브릭스 4개국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 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 4개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가 훨씬 넘는 27억 명이나 된다. 따라서 막대한 내수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노동력 역시 막강하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브릭스 4개국의 막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국가들은 2030년 무렵이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관주의자로 유명한 ‘닥터 둠’ (Dr. Doom) 누리엘 루비니

(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는 브릭스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BRICK'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교한 첨단기술로 무장한, 혁신적이며 역동적이고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이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인다. 루비니 교수는 한국에게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남과 북으로 대치 중인 북한의 문제³¹⁾”라고 지적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는 우리의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2010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82.4%로 2년 연속 80%대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 변수에 극심한 영향을 받는 원인이기도 하다. 같은 해 일본의 무역 의존도가 22.3%, 미국이 18.7%, 중국이 4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서 대외무역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알 수 있다.

(2) 통일 경제의 시너지 효과

통일은 남북한이 보유한 경제적 역량의 결합을 통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은 이미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보기술(IT) 부문에서 한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IT 선도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07년도 세계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 한국은 879억 4,700만 달러의 IT 제품을

31. 누리엘 루비니 · 스티븐 미흠, {위기 경제학}, 허익준 역 (서울 : 청림출판, 2010), p. 466.

수출해 전 세계 IT 수출시장의 6.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주요 5대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 이동통신단말기, 디스플레이와 같은 IT 부문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선박도 포함된다. 이처럼 한국의 최근 성장 동력은 현재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이며, 이들 부문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를 향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경기침체로 경제적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지만 질 높고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하자원의 보고라 할 만큼 다양하고 많은 광물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6,983조 원으로 우리가 보유한 289조 원의 가치보다 24배나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자체의 경제력만으로는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장에도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부족한 자원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일은 북한이 가진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자본력을 결합시킴으로써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이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험을 가진 나라이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발전 경험은 선진국의 발전

표 5.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광 물	품위(%)	단위	매장량		잠재가치(억원)	
			북한	남한	북한	남한
금	금속기준	톤	2,000.0	42.7	613,274	13,093
은	금속기준	톤	5,000.0	1,349.8	19,124	5,162
동	금속기준	천톤	2,900.0	51.0	92791	1,631
연	금속기준	천톤	10,600.0	372.0	110,913	3,892
아연	금속기준	천톤	21,100.0	557.9	260,680	6,892
철	Fe 50%	억톤	5,000.0	37.3	3,045,300	22,717
중석	WO ₃ 65%	천톤	246.0	128.6	406	212
몰리브덴	MoS ₂ 90%	천톤	54.0	24.2	16,669	7,470
망간	Mn 40%	천톤	300.0	176.4	1,864	1,096
니켈	금속기준	천톤	36.0	-	4,290	-
인상흑연	FC 100%	천톤	2,000.0	121.6	12,049	732
석회석	각급	억톤	1,000.0	103.3	11,838,000	1,223,344
고령토	각급	천톤	2,000.0	110,773.4	349	19,336
활석	각급	천톤	700.0	11,131.2	840	13,357
형석	각급	천톤	500.0	477.0	1,256	1,198
중정석	각급	천톤	2,100.0	842.1	3,415	1,369
인회석	각급	억톤	1.5	-	388,326	-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60.0	-	26,797,320	-
무연탄	각급	억톤	45.0	13.6	5,194,350	1,569,848
갈탄	각급	억톤	160.0	-	21,434,720	-
합계					69,835,936	2,891,349

* 남한의 매장량은 확정량과 추정량을 산출하여 집계한 것이며, 북한 매장량은 잠재 매장량임.
출처 : 한국광물자원공사, 『2009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2009) ;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2008).

경험보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적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우리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공유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

부터 2009년까지 6년간 15개국 134개 과제를 지원하여 지원대상
국에 '경제 한류'를 불러일으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통일 이후 낙후된 북한지
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미 남북경협에서도 남북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
한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
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상생적 경제협력 모델이다. 남북한 IT 경
협에서도 유사한 모델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의
높은 수준의 IT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전문인력과 결합하여 남
북합작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남북경협 모델들이
모두 다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러한 모델이 안
정적인 남북관계, 나아가 통일 이후 작동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성공모델로 만들 수 있는 협력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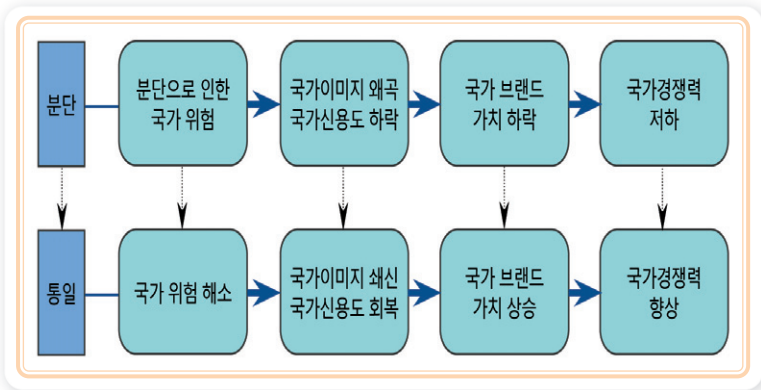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한 전쟁 가능성 해소라
는 소극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한국의 브랜드 가치의 급격한 상
승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무디스(Moody's)나 S&P와 같은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은
2010년부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평가에 북한의 급변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관심은 북한의 붕괴 그

자체보다도 한국이 정치적·법적·재정적으로 얼마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재정부담 능력, 통일비용의 최소화 방안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분단과 그로 인한 정세 불안이 국가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경색되면 한국의 증권시장이 출렁이며 주가가 하락하고 심지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곤 했다.

분단은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도 크게 저하시킨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우리는 상시적인 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항상 이를 관리하는데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로 인해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며 국가 신용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로 귀결된다. 그러나 분단의 해소, 즉 통일만으로도 이와 같은 국가 경쟁력 저

그림 6. 분단과 통일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한 국가 위험이 해소되면 왜곡된 대외적 국가 이미지와 국가 신용도도 정상화된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 절하되었던 국가 브랜드 가치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에 상응하여 국가 경쟁력도 향상된다.

통일로 안보 불안이 해소될 경우,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 경쟁력은 훨씬 크게 상승할 것이다. 국가신인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도 상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자유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북한 변수에 따른 불안정성이 해소됨으로써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분단을 극복하면 갈등과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브랜드의 대한민국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 하에 세계경제를 향해 새롭게 뻗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를 꺼렸던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남북한 경제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경우, 우리는 제2의 압축적 고도성장을 이룰 수도 있다. 이때의 대한민국은 취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직업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풍요롭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된다. 당연히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며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안보적 차원

(1) 전쟁 위협의 근원적 해소

오늘날 안보 개념은 다양화 속에 인간 안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이 가장 절실한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 남북한은 막대한 병력과 화력을 휴전선에 집중하고 있다. 후방에서의 평화로운 일상과 달리, 휴전선 근처에서는 남북한 모두 상시적인 전시체제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남북 또는 미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휴전선 근처에서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기도 한다. 또 부정기적이지만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소규모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도 일어난다. 바다에서의 긴장감은 더하다.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을 중심으로 어민들의 평화로운 조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수시로 북한 군함이 NLL을 침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한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와 충돌로 한반도는 끊임없는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협은 이러한 직접적인 남북한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리한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주범이다. 그리고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강대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이른바 ‘6자회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와 동북아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함께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면서 일본과 미국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한의 호전적 태도는 남북관계의 긴장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확장을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그리고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협력을 위한 지역 국제기구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갈등과 대결을 관리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통일은 휴전선과 NLL에서의 군사적 긴장해소는 물론 북한의 핵문제까지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다. 그럼으로써 통일은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 평화로 이어지고 동북아에서의 지역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북한의 대남 테러 소멸

분단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북한의 각종 대남 테러를 우려하면서 지내고 있다. 테러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거나 소중한 국가 정보와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대남 테러를 자행해 왔다. 과거에는 주로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사회 혼란과 주요 국가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의 방식으로 테러를 저질러 왔다. 북한은 1968년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무장간첩을 남파시키기도 했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희생된 테러만도 여러 차례이다. 1987년 11월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된 'KAL기 폭파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민간인 대상 테러이다. 이 사건으로 115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1983년 10월에는 버마(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우리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테러로 인하여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는 북한군의 선제공격으로 남북한 해군 간에 여러 차례의 충돌이 있었다.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10일의 대청해전에 이어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을 폭침하고 11월에는 연평도를 포격하기에 이르렀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우리 해군 병사 4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구조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다. 특히, 민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연평도 포격사건은 보다 심각한 도발로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대남 테러로 희생된 선량한 국민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분단비용이다. 통일은 이러한 테러로부터의 희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아무리 통일비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테러 행태는 현실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몇 차례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2009년 '7·7 디도스(DDos) 대란'은 북한이 저지른 대남 사이버 테러였다. 이로 인해 극심한 사이버 혼란과 함께 100여 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파괴되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테러는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우리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공격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도발은 사이버공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러한 예측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테러로 2011년 4월 미국 하원의원 8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실 공간에서의 인명 살상 테러도 경계의 대상이지만, 사이버 테러도 그에 못지 않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부르스 윌리스라는 미국 배우가 주연한 '다이하드 4'라는 영화는 사이버 테러를 소재로 다룬 영화이다. 이 영화는 사이버 테러가 이루어졌을 경우 모든 정보통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 작동되는 거의 모든 사회 인프라의 네트워크가 마비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 기간까지 흔들리고 각종 범죄와 약탈 등 아비규환의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테러는 아무 죄 없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희생의 목표로 삼는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그동안 숭한 북한의 테러를 경험했다. 통일은 북한의 대남테러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4) 사회·문화적 차원

(1) 남북한 동질화 및 다양화

통일은 그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하에서 살아 온 남북한 주민들을 같은 이념과 체제인 통일국가에서 살 수 있게 한다. 통일로 인하여 분단 이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질화되어 온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개인의 의식과 사고 등은 동질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분단 이전의 고유한 미풍양속, 생활방식, 사고방식, 행동 양태, 심지어 언어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이 동질화의 과정으로 수렴될 것이다.

사실 남북한 사회문화의 이질성은 북한주민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접촉이 어려운 전후 세대나 젊은이에게는 실감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를 실감할 수 있다. 가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북한의 뉴스를 보면, 단어와 어투, 의미 등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통일퀴즈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 중의 하나도 북한 용어의 뜻풀이가 되곤 한다. 그만큼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이질화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하나의 예이다.

생활수준에서도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 정도는 크다. 생활수준의 이질화는 삶의 질 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고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새로운 정보기기들의 등장엔 눈과 귀를 기울이는 우리 청소년들의 사고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세대의 경우는 2~3년의 차이만 있어도 사고와 행동패턴이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사정을 감안할 경우, 남북한 청소년 간의 이질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통일은 분단 이후 자꾸만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를 동질화 내지는 다양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남북한 사회문화적 이질화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지속·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분단 구조의 내재화·일상화로부터의 탈피

분단의 폐해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얼른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다. 이산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이념적인 사회 갈등,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 등 수많은 사회문화적 충돌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의 폐해들은 이미 너

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단의 폐해도 분단의 사회적 비용임에 틀림없다.

남북 분단체제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으로 대결하며 갈등과 투쟁으로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대립과 배타적 상호관계의 외적 환경은 남북한 사회 내부에 분단구조를 내재화했다. 그러한 분단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은 적대적 대립과 흑백논리, 대결을 일상화·내면화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사회관계는 폐쇄적·배타적으로 변해 버렸다.

분단은 우리 사회에 불신을 증폭시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고갈시키고 있다. 분단 상황으로 확대된 이러한 남북한 간의 불신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내부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정착되었다.³²⁾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단의 폐해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은 때가 되면 군대에 가야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 입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또한 분단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갈등에 빠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가

32. 김병로, “21세기적 통일비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제4기 통일아카데미 강연자료집 (2008. 10. 7), pp. 8~9.

에 따라 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기 일쑤였다. 그동안 치러 온, 그리고 앞으로 치러야 할 천문학적 분단비용을 고려한다면 통일비용은 결코 분단비용에 견줄 수 없다.

(3) 남남 갈등의 소멸과 사회 통합

남남 갈등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다. 이는 주로 대북정책의 성격을 둘러싼 갈등이다. 진보 세력들은 북한을 최대한 포용하는 입장에서 화해와 협력을 우선 시하는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보수세력들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인권과 민주화의 보편적 실현을 강조하는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남 갈등은 단순히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적 선호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 저변에는 이념적 스펙트럼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와 우파, 또는 진보와 보수의 균열, 성장과 분배와 같은 경제 정책적 선호의 균열, 심지어 청년층과 장년층 간의 세대간 균열 등이 중첩되어 있다. 이것은 대북정책이 그만큼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응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남 갈등은 ‘북한 변수’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외적 변수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해 항상 고려해야 하는 ‘상수’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³³⁾

남남 갈등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해왔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일소되고 보다 실질적인 측

33. 고성준·고경민, 『대북정책의 지역사회 확산체계 구축방안』, 조한범 외, 『대북정책의 대 국민 확산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면에서 민주적·다원적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소멸됨으로써 한국 정치 갈등의 주요한 축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과 논쟁으로 정치적 담론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다³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소멸은 곧 새로운 ‘통합의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깊은 갈등의 골을 형성해 온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경우, 그것이 사회 통합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따라 경제발전과 사회 통합에 국력을 결집시키는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새로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된다.

34. 고성준·고경민, “대북정책의 지역사회 확산체계 구축방안”.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통일 한국의 비전

1. 정치 · 외교적 비전
2. 경제적 비전
3. 안보적 비전
4. 사회 · 문화적 비전



Ⅵ. 통일 한국의 비전

1. 정치·외교적 비전

1) 제2의 국가 건설과 선진국 도약

통일은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통일된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은 21세기 통일 한국의 웅비를 위한 제2의 국가건설이 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2의 국가 건설은 다소 생경한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은 65년 이상을 분단국가로 존속해 왔다. 통일은 분단된 남북한이 하나가 됨으로써 '통일 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되는, 즉 제2의 국가 건설 과정이기도 하다.

20세기 중반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세계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동적이고 경이적인 것이었다.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은 반 세기 동안 7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경제규모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한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했고,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국제질서에 종속되었던 약소국에서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G-20의 주도국의 하나로 약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발전상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굳이 남북한 구분 없이 하나의 국호와 체제 아래 남북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기존 성장 엔진에 또 다른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다. 통일 한국은 두 개의 성장 엔진을 장착하여 한층 강화된 발전 역량을 갖추고 초일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국가 건설로 이룩한 ‘통일 한국’은 통일 위업을 달성한 새로운 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를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과거 독일이 통일되던 당시의 기대 이상으로 새로운 통일국가의 탄생을 축하해 줄 것이다. 상상만 해 오던 ‘통일 한국’이라는 통일국가의 건설은 남북한 주민의 기대와 열망, 비전을 하나로 모은 진정한 민족공동체로 거듭나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2) 국제무대에서 이미지 개선과 활동 기회 확대

분단 상황으로 인해 외국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공존과 경쟁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 개발 국가이자 테러지원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이미지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저 ‘코리아’ 라면 남한인지 북한인지 구분 없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독일은 통일 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자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군사적 충돌 사태에 주요한 문제 해결자로서 당당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유럽 통합의 기관차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통일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과 우호에 앞장섬으로써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통일은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로 집중시킬 것이다. 통일은 곧 세계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분단 한국’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통일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줌으로써 한국과 한국인들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로 한층 더 넓어진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또 통일로 한층 새로워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토대로 우리 국민들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기회도 훨씬 자유로워지고 넓어질 것이다.

3) 베세토(BESETO) 벨트의 중심국가로 부상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국가는 단연 한·중·일 3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국의 수도이자 중심 도시가 바로 우리나라 서울,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이다. 이들 세 도시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북아의 글로벌 도시로서, 이들 도시를 연결하여 베세토(BESETO)로 명명하기도 한다. 베이징~도쿄까지 비행시간이 3시간 안팎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들이 무수히 많은 곳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서울, 즉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이다. 바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심축(hub)에 해당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을 연결할 수 있는 물류기지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나아가 유럽과 북미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로의 개발로 그 역할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통일 한국은 바로 베세토 벨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세토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가적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 협력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일된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대결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4) 북한 동포의 빈곤과 인권 개선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인권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치범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은 전근대적 국가폭력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빈곤 문제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이라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인권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

최근 북한의 빈곤은 전력 사정 악화로 인해 ‘밤만 되면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림 7>에서 보듯이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사진에는 남한 전역에서 빛나는

그림 7. NASA의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



불빛과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평양 지역 이외에는 거의 암흑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북한의 전력난으로 인해 밤에도 불을 켜지 못하고 생활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0년 9월 유엔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세계 189개국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평화, 인간 안보, 개발, 인권, 기본적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는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 따른 여파는 북한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면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북한의 빈곤과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통일이다. 통일은 정치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통일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빈곤과 인권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비로소 통일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2. 경제적 비전

1)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경학적(Geo-Economics) 국토

분단으로 인한 지리적 폐쇄성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가 되어버린 우

리에게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시장 통합이라는 두 공간의 통합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물류 및 교통 부문에서의 통일 효과이다.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외 수출은 항상 해상을 통해야 한다. 해상을 통해 부산항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만약 통일이 되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면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철도로 18일이면 충분하다. 또한 철도를 이용하면 수송비도 절반 정도로 절감된다 (<표 6> 참조).

남한의 대륙 연결은 남북한 통합 공간 창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접경 국가와 몽골,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권 형성에 이바지하며 역내 교류·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이런 거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출로가 넓게 열리는 셈이다.

표 6. 철도운송과 해상운송 운임 비교

(단위 : 달러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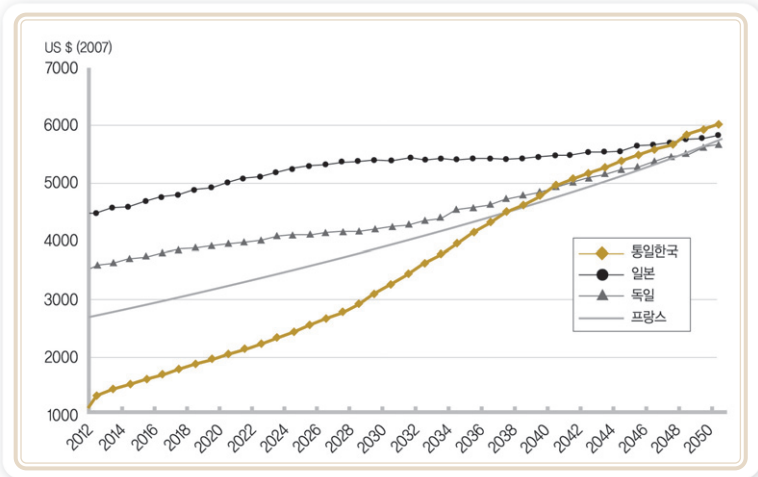
구분	남북교역	한국 - 중국	한국 - 유럽, 러시아
철도운송	15.1	27.0	38.2
해상운송	64.0	62.4	72.0

출처 : 성낙문 외, 『남북연결 도로·철도의 교통 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 한국교통연구원(2005).

2) 국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미국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2009년 발간한 “통일 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라는 보고서는 통일 후 20~30년 내에 프랑스, 일본, 독일의 GDP를 추월할 것이고, <그림 8>와 같이 남북한이 2013년부터 통합을 시작한 경우, 2050년이 되면 통일 한국의 GDP 규모는 일본, 독일, 프랑스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있다. 한반도가 많은 비용을 수반한 독일식 통일 모델이 아닌 1국 2체제가 공존하는 ‘중국-홍콩식’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골드만삭스는 ‘중국-홍콩식’ 모델에 따라 경제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면 적당한 정책적 뒷받침 아래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일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8. 2050년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



출처 : 골드만 삭스(GS Global ECS Research)

사실 한국이 분단 이후에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중진국의 문턱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는 바로 통일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통일 한국의 전체 GDP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통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남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상승시켜 이를 발현시킬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도 현재의 다른 선진국들 못지않게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3)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는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저평가를 의미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국가 신용도와 국가 브랜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이내의 수출대국이고 GDP 규모도 세계 10위권이지만, 한국의 국가 신용도와 국가 브랜드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0년 4월 14일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한 단계 높였다. 우리가 받은 신용등급 ‘A1’은 중국, 이스라엘, 체코, 칠레와 같은 수준이다. 최고등급인 ‘Aaa’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를 물론, ‘Aa2’인 일본, 홍콩,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Aa3’인 대만, 마카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낮은 수준이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존재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계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분

단 현실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변수가 되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다시 일깨워준 동시에 그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건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러한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의 국가 신용등급은 다른 선진국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국제적 국가 브랜드 평가기관 독일 안홀트·GMI사의 2009년 국가 브랜드 지수(Nation Brand Index)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50개국 가운데 31위로 아시아에서 중국(22위), 싱가포르(24위), 인도(26위)에도 뒤쳐져 있다. 2008년의 33위에서 31위로 올라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과 바깥에 비친 한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 2008년 1위 국가인 미국과 비교하면 세계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한국 제품은 미국 제품에 비해 값을 평균 30% 덜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를 10%만 개선해도 국내 3대 기업이 올리는 영업이익인 130억 달러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상시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대비 10%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를 2010년 4월 30일자 주식시장 시가총액 1,218조 원에 대입해 보면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손실은 82조원에 달한다.

군사적 대결과 충돌이 빈번한 분단국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은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인

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며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불안한 국가 이미지를 없애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가 신용 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 (Korea Premium)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할 것이다.

4) 취업기회의 확대

통일은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그 중에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재생시키기 위한 실업문제의 해소가 대표적인 당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일자리가 주로 한국 내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으로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다. 특히 아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로 대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외국 취업 기회도 지금보다 훨씬 넓게 열리게 되고, 한국어와 한글 사용지역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을 남한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시설이 필요하다.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 외에도 공단 조성,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과 그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북

한의 노동력도 필요하지만 남한의 작업 시스템에 적응된 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 젊은이들의 당면 과제인 취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좁은 취업문 때문에 대학 졸업을 일부러 늦추거나 졸업 이후에도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어학연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취업의 분야도 통일로 대륙과 연결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동유럽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3. 안보적 비전

1) 전쟁과 테러 공포로부터의 자유

북한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시키다가 하면, 같은 해 11월에는 연평도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테러를 일삼아 왔다. 특히 연평도 사건은 민가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포격이었으며, 이로 인해 1,700여 명의 연평도 주민 95%가 인천으로 피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은 심각한 전쟁공포에 휩싸여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에도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있는 연평도와 대청도 근해에서 끊임없이 무력도발

을 이어왔다. 1999년 6월 15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제1차 연평해전, 전 세계가 한일월드컵에 환호하고 있던 2002년 6월 29일 북한이 우리 해군 참수리 357을 기습 공격하여 발발한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인근에서 북한이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제공격해음으로서 벌어진 대청해전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 이외에도 1968년 1월 청와대 기습사건, 1983년 10월 버마(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아웅산 테러 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전쟁과 테러의 상시적 위협 속에 살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테러는 냉전과 탈냉전 구분 없이 남북관계 호전과 경색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일순간 전쟁공포에 휩싸였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갖고 있다.

통일은 남북한 동족 간에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남북한 간의 전면전은 승패 여부를 떠나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 없다. 통일을 이룸으로써 남북한 간에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안보적 이익이며,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됨을 의미한다.

2) 병역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인과 국가 발전의 동력 증강

우리의 현행 병역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의무병제이다. 그리고 장교·하사관 등 장기 복무 희망자가 지원에 의해 복무하는 모병제도 병행되고 있다. 국가의 방위를 위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우리 처럼 상시적인 군사적 대치 상태로 안보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국방은 나와 가족, 우리 사회, 그리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민적 책무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군사적 대치로 인한 상시적 안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방 분야에서의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통일이 된다고 해서 국방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단 상태에서처럼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국방에 소요되는 예산이 감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제도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군복무 기간의 단축, 국방인력의 적정 수준으로의 축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가 정착될 경우 의무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들은 군대에서 2년여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통일이 되어 모병제로 바뀔 경우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학업을 계속하거나 각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막대한 인력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일로 인한 병역제도의 전환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단 상황에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2년여 동안 군대에서 보내는 일이 불가피하다.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 국민들이 안락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은 그 자체로서 안락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거나 또 장기적으로는 부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와 국가 발전의 동력이 증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국방예산 절감분을 교육 및 복지예산으로 전환

통일로 인해 막대한 국방예산이 절감될 경우 그 혜택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복지 부문의 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세계화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경쟁에서 낙오한 열패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숙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이 절감될 경우, 학교교육의 질을 더욱 높임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열패자들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전체적으로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회 안전망도 보다 튼튼해져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4. 사회·문화적 비전

1) 남북한과 해외동포가 결합된 ‘글로벌 통일 한국’ 완성

우리가 통일을 논의할 때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 식민통치와 분단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땅을 등져야 했던 같은 민족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생각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통일 한국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아닌 민족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해외동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은 비로소 남북한 및 해외동포가 하나 되는 진정한 ‘글로벌 통일 한국’을 완성하는 일이다.

통일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응집력 있는 민족이 세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유대인, 인도인, 화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결집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통일은 이런 점에서 한민족이 세계 상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분단으로 경원시 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통일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통일을 통해 이

룩한 충분한 내부적 역량에 해외 동포들의 역량까지 결합시켜 나간다면 미래의 한민족은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응비할 것이다.

2) 남북한 학문 융합을 통한 선진 학문역량의 구축과 인적 자산 보유

남북한의 교육은 통일 후 적절히 조정되면 높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컨대, 과학 분야의 경우 북한은 응용과학에 비해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해 왔고 우리의 경우는 응용과학이 기초과학에 비해 더 인기가 있다. 따라서 통일은 한국 과학교육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병행 발전을 통해 균형을 이룸으로써 과학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우리의 역사의식과 그에 대한 관심은 한층 배가될 것이다. 통일은 간도, 만주, 발해 및 고구려 역사 등 우리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보존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청소년이 그동안 방문할 수 없었던 북한 지역의 고구려와 고려 유적지를 통일 이후에는 교육 현장화하여 상시 방문할 수도 있다.

또한 동서 냉전의 시대는 종결되었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선진 학문을 배우는 창구로 서로 다른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반면, 북한은 러시아, 중국, 동유럽 등에서 공부한 고급인력들이 있다. 이러한 남북한 각각의 선진학문 학습이 통일이 되면 다변화되어 훨씬 수준 높은 학문을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의 학문간 교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최고의 교육 수준과 인적 자원을 가진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노벨상 수상도 한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3) 스포츠 강국으로 입지 강화

통일 한국은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분단 상황에서는 남북한이 각각의 국가로 출전하여 세계와 경쟁하지만, 통일이 되었을 경우 경기력과 경쟁력이 높아져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동안 세계대회에 남북한 단일 팀으로 출전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통일 후 한국 스포츠는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여 종합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여 종합순위 33위를 차지했다. 남북한이 획득한 메달을 합하면 6위인 호주(금 14, 은 15, 동 17)를 제치고 5위인 독일(금 16, 은 10, 동 15)을 바짝 따라붙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국가 단위로 경쟁하는 월드컵 축구에서도 현재보다 우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 한국은 2002년 FIFA 월드컵에서 경이적인 성적인 세계 4강을 달성했지만,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17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15위를 기록(북한은 32위)했

다. 통일이 되었다면, 한국의 2002년 월드컵 4강의 성적은 항상 도전 가능하고 또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축구는 치렀지만 동계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경험은 아직 없다. 통일 후 동계스포츠를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 동계 스포츠의 메카이자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지역의 기후를 적극 활용하여 스키, 스케이트 등 다양한 동계 스포츠를 청소년의 생활운동으로 활성화할 수도 있다.

4) 해외여행의 새로운 경로 개발

통일은 북한의 명승고적과 명산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해 준다. 북한의 평양과 개성은 고구려와 고려의 도읍이었으며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등의 명산도 북한에 있다. 통일이 됨으로써 이러한 북한의 명승고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말로만 듣고 그림이나 TV 화면, 모니터로만 보던 북한 각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백두산에 가려해도 중국을 통해서 가야 하지만 통일이 되면 백두산뿐만 아니라 금강산, 묘향산 등 북한 곳곳에 있는 명산과 여러 문화유적지를 육로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기존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북한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 지역 및 유럽으로

까지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광대한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나 지평선이 보이는 광활한 대륙에서의 자동차 여행은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여행코스이다. 또 유럽으로의 여행이 막대한 항공료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육상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유럽여행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통일은 남북의 생활공간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더 넓은 삶의 터전을 만들고 대륙으로 통하는 자유로운 공간을 건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8



맺음말

Ⅶ. 맺음말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출발점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통일이 가져다줄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통일 필요성과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약화된 통일의식을 끌어올리고 통일의 의지와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시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들은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발굴도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통일 필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한 논리와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

표 7. 통일 필요성 재인식의 논리와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

구분	통일 필요성 재인식의 논리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
정치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소국 증견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주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의 국가 건설과 '통일 한국'과 선진국 도약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과 활동 기회 확대 베세토(BESETO) 벨트의 중심국가로 부상 북한 동포의 빈곤과 인권 개선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의 경제' 효과 통일 경제의 시너지 효과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국토 국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취업기회 확대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 위협의 근원적 해소 북한의 대남 테러의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과 테러 공포로부터의 자유 병역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인과 국가 발전의 동력 증강 국방예산 절감분을 교육 및 복지 예산으로 전환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동질화 및 다양화 분단 구조의 내재화·일상화로부터의 탈피 남남 갈등의 소멸과 사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과 해외동포가 결합된 '글로벌 통일 한국' 완성 남북한 학문 융합을 통한 선진 학문역량의 구축과 인적 자산 보유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 해외여행의 새로운 경로 개발

고 있다. <표 7>은 이 글에서 제시된 통일 필요성 재인식의 논리와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여기서 제시된 논리와 근거, 사례들이 전부는 아니다. 이 글은 단지 이러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 필요성의 논리와 통일 한국의 미래비전에

대한 논리와 근거 및 사례 개발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은 기존의 논리 체계나 내용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합리적 비판을 바탕으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와 통일 이후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을 위한 새로운 통일 필요성의 논리는 기존의 국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을 망라하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통일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도 아니며 실용적 차원의 이익이나 편익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 있고 국민적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당위적 차원이나 인도적 차원의 논리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논리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명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문제의 복합성과 중층성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적 수준에서 긍정적 결과를 수반한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재인식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왜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의문이 남도록 해서는 통일을 이루기도 또 설사 통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통일 이후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새롭게 정

립하는 일은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 필요성의 새로운 논리와 통일 이후의 다양한 미래 비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성준·고경민**, “대북정책의 지역사회 확산체계 구축방안,” 조한범 외, 『대북 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 고성준·변종현·고경민·양영길·김병성**, 『청소년 대상 통일 필요성 논리 개발』, 통일부 학술용역보고서 2010.
- 김근식**,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 6·15 공동 선언 2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4호, 2003.
- 김병로**, “21세기적 통일비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제4기 통일아카데미 강연자료집, 2008. 10. 7.
- 김영수**,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 박재규 편,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서울: 법문사, 2011.
- 누리엘 루비니·스티븐 미흠**, 『위기 경제학』, 허익준 역, 서울 : 청림출판, 2010.
- 박명림**,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한반도 포럼 창립학술 회의 발제문, 2011. 3. 28.
- 박종철 외**, 『통일 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9-03,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박종철**,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과 이행구도,” 통일연구원 주최,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자료집, 2010. 9. 1.
- 서재진**, “통일비전과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제주지역 학교 통일교육 대토론회,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기초강연 자료집, 2010. 9. 17.
- 성낙문 외**, 『남북연결 도로·철도의 교통 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5.
- 손기웅**,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8. 31.
- 오기성**, “학교 통일교육의 진단과 개선방향,” 『평화학연구』, 제9권 2호, 2008.
- 오충석**, “미래세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공감코리아, 2010. 5. 4.
- 우평균**, “통일교육의 구상과 실천과제 :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평화학연구』, 제10권 1호, 2009.
- 유병규·홍순직·최성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간』, 10-42, 통권 422호, 2010. 10. 28.
- 이상우**, “통일교육의 어제, 오늘과 내일,” 제17기 통일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출범기념 세미나,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의 방향』, 2010. 5. 13.
- 정구현·정갑영**, 『통일 빠를수록 통일비용 덜 든다 :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어느 쪽이 더 큰가?』, 동화연구소, 1997.
-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학술회의 자료집, 1997. 6. 5.
- 최진욱**,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일연구원 주최,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세미나 자료집, 2010. 10. 5.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 2010.
- 통일부**, “8·15 경축사(통일분야) 참고자료,” 2010. 8.
- 통일부**, “청소년 통일의식 관련 설문조사 종합보고,” 2009. 9. 28.
- 한국광물자원공사**, 『2009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2009.
-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 2008.

한국수출입은행, 『독일통일백서』, 2009.

한운석, “독일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 『역사담론』, 제54집, 2009.

Jurgen Aretz,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 과정 그리고 전망,”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평화재단 공동주최,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 코리아를 내다본다 : 지속과 변화, 통합의 정치』 세미나 자료집, 2009. 6. 23.

Ralph M. Wrobel, “The Benefits of German Unification: A Review After 20 Years,” 통일연구원 주최, 『독일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세미나 자료집, 2010. 10. 5.

Goohoon Kwon, “A Unifi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Global Economic Paper No : 188, Goldman Sachs, 2009.

OECD,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10.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7.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목록』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10. 김정일시대의 북한교육의 변화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18. 북한의 의료실태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1. 북한의 체육실태
22. 북한의 문화재 실태
23. 북한의 대남전략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발행일 2011년 7월 · 편집/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12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전화 02)901-7161~7 /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 매 품〉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은
기존의 논리 체계나 내용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와 통일 이후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